



원유 수급안정에 대한 소고



이만재
서울우유협동조합 지도상무

우유의 수급문제는 낙농이 시작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

우유라는 특별한 물리적 성질 때문이다.

고대인들은 우유의 저장수단을 발효상태로 만드는 기술을 터득하여 수급문제를 다소 해결하였고 현대인들은 에너지의 힘을 빌어 우유를 말려서 저장함으로써 고대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수급을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다. 세계가 하나의 시장 처럼 된 지금 우유의 수급은 늘 공급과잉에서 문제가 생긴다. 모자라면 즉시 수입 공급이 가능하지만 과잉되면 경제적인 대량손실이 발생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가격 경쟁력이 거의 바닥선에 있는 상황에서는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낙농산업에는 수급안정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유가 모자라면 공급자인 낙농가들이 큰소리치고 거래조건이 좀 더 좋은 곳으로 철새처럼 왔다 갔다하기도 하고 지역적인 거래교섭단체를 만들어서 흥정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우유를 사는 가공업체는 우유의 품질검사도 대충해서 받아들인다.

반대로 우유가 남으면 유가공업체는 일방적으로 일정량 이상의 우유는 받을 수 없다고 텅기고 검사도 까다로워지게되어 낙농가들은 울상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모든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원유의 농가수취가에 대한 지지가격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가 수급량에

만 맞는 량의 우유생산분에 대하여는 제값(정부가 합당하다고 정해준 값)만큼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정부가 가격을 정해서 생산농가를 보호하고 있는 농산물은 우유밖에 없다.

주식인 쌀도 정부수매가격은 있지만 농가가 누구에게 팔든 어떤 값을 받든 상관하지 않는다. 우유는 그만큼 생산기반의 조성이 어렵고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고 국민이 충분한 우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인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선진국이든 낙농이 발달되지 않은 나라는 없다. 그것은 낙농발전이 그 나라가 선진국이 되기위한 하나의 필수과목이라는 조건이 되어있는 셈이다.

그래서 선진국의 낙농가들은 원

유의 생산가격을 보장받는 동시에
수급안정에 대한 보장도 동시에 누
리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나라 낙농정
책의 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 낙농가들은 원유의 생
산가격은 정부가 설정한 값으로 보
장받게되어 있지만 수급불안정에
대하여는 속수무책인 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해서 가격보장에 대한 효
과를 얻을 수 없게되어 있기 때문
이다.

우유가 남아서 넘치면 낙농가들
은 원유가격에 반값 밖에 안되는
분유를 우유값 대신에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1950~1970년대의 유럽을 비롯
한 세계의 선진국가들은 세계대전
이후 부족한 식량과 낙후된 농업생
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색혁명을
계속 추구하였고 모든 것이 증산
일변도의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그 결과 1970년대 부터 서서히
생산과잉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
였고 쌓이는 재고 부담을 당시 유
럽공동체나 정부기관들이 감당하
였다.

1976~1985년 당시의 유럽공동
체나 미국정부투자기관인 미상품
신용공사가 한해에 투입한 우유,유
제품의 재고저장품비용은 각각 미
화로 약20~25억달러에 이르렀
다. 그래서 1970년대 후반 부터 각
국 정부들은 눈더미처럼 쌓여만가
는 분유나 버터의 재고를 감당 할
길이 없게 되자 각종 감산정책을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우유가 주식의 하나인 서구국가

.....

**주식인 쌀도 정부수매가격은
있지만 농가가 누구에게 팔든 어떤 값을 받든
상관하지 않는다. 우유는 그만큼 생산기반의
조성이 어렵고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고 국민이 충분한 우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인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선진국이든 낙농이 발달되지
않은 나라는 없다. 그것은 낙농발전이
그 나라가 선진국이 되기위한 하나의
필수과목이라는 조건이 되어있는 셈이다.**

.....

들에게 국민에 대한 우유의 안정공
급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국가
또는 연합국가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안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각 국가별로
수요량에 알맞는 생산할당을 하고
각농가에 대해서는 생산할당량,
즉 쿼타를 배정하는 제도를 채택
하게 되었고, 미국인들은 작목전
환 보상제도와 원유가격 억제
를 통하여 과잉생산을 통제하는 수
단을 사용하고 일본인들은 계획생
산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농가차원
에서 생산을 억제하는 방법을 동원
하고 집유일원화를 통하여 집유구
역별로 생산할당을 함으로서 수
급안정을 꾀하고 있다. 영연방국
가들도 모두 농가에 대한 쿼타제
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간
과해서는 안될 점은 그 모든 선진
국들은 낙농가에 대한 확실한 복지
생활,생산활동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낙농이 매우 주요한 식량생산의
하나이며 낙농업이란 모든 농사 일
중에 가장 힘들고 위험하고 어렵
기 때문에 선진국 농민들을 낙농에
종사하도록 매어 두기위해서 충분
한 보호와 보장을 하고 있다는 점
이다.

그래서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선
진국들의 농업생산자보조금상당
량(PSE) 중에서 우유가 다른 농산
물에 비하여 2~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
다. 이 부분은 우루과이라운드 이
후에도 마찬가지로 우유에 대한
보조가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
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우루과이라
운드 이후 우유,유제품에 대한 수
입 보호장치가 여전히 더 강화되어
발효되고 있음을 볼 때 선진국들
의 낙농정책이 수급안정을 위하
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가지는 낙농가들의 이해와
협력과 노력의 분담이라는 것이 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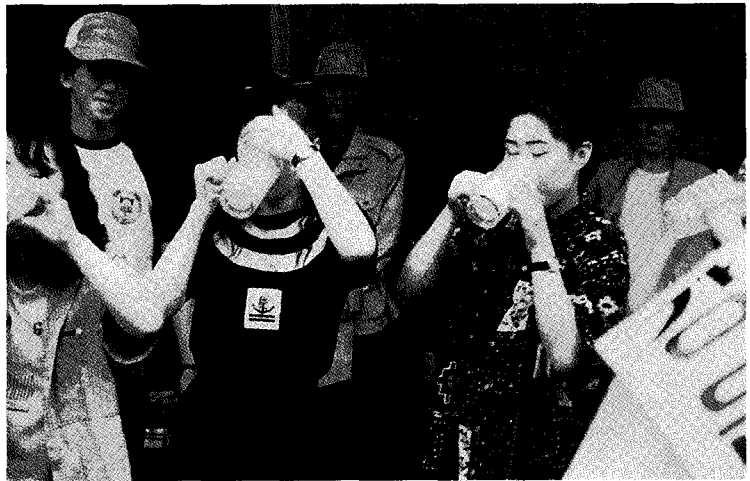
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수급안정에 다른 주요한 부분은 역시 소비확대에 있다. 그래서 선진국의 낙농가들은 정부의 도움없이 스스로 돈을 모아서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하며 우유소비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 쿼터제도의 도입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은 많았지만 결국 낙농가들이 표결로 채택해서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을 예방함으로써 스스로 낙농소득을 잘 지켜나가는 협동정신을 발휘하고 있다.

이제 우리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는 가격지지 정책은 있으나 수급안정에 대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유 공급 과잉시에는 낙농가에게만 모든 손실부담이 돌아오게 됨으로서 생산활동의 기반이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또 소비확대에 대하여는 정부차원에서 학교급식에 극히 일부 지원이 있으나 전반적인 우유소비 확대운동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우유가 남으니 국민 여러분들께서 농민들을 위해서 우유마시기운동 좀 합시다라는 매우 소극적이고 치사한 운동이 고작이다. 왜 낙농가가 국민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구걸하는 구차한 짓을 해야하는가?

당당하게 우유라는 인류 최고의 완벽한 식품을 국민들이 충분히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지도하는 입장에서, 국민들이 무슨 손해보는 것이 원조하는 기본으로 우유를 마시



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우유가 우리 몸에 좋고 2세들의 성장과 장래를 위해서라도 꼭 마셔야 되겠다는 필요충족이 되도록 홍보를 할 수는 없는 것인가?

우리가 처해있는 현재의 원유수급상황은 공급과잉의 상태보다는 소비의 위축이라는 비중이 더 큰 것이다.

그러나 이유야 어떠하든 일단 우유가 남으면 생산을 줄여서 수급의 안정을 기하지 않으면 당장 낙농가의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생산조절이라는 필연적인 조치가 뒤 따르기 마련이다. 낙농가의 입장에서 볼 때 피땀어린 우유 한 방울도 줄인다는 것이 참으로 분개하고 안타깝고 원통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계속 생산만하다가는 모두가 같이 공멸해버리는 더 큰 재앙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천원하던 김장배추 한포기가 10원도 못받아 밭에서 거둬들이는 품삭도 못건지는 형편이 되어 밭째 갈아 엎어버리는 경우를

흔하게 보아 왔다.

그럴때 수요보다 공급이 과잉되는 비율이 겨우 10%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농산물은 대체로 저장성이 없고, 출하시간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농민들은 흥정을 할 때 늘 불리한 입장에서 있기 마련이다.

그런 이유로 서양의 농경제학자 "킹"이라는 사람은 농산물은 소비량보다 더 많이 생산되면 더 생산된 비율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가격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하나의 불변의 법칙으로 정리하기도 하였다.

그 법칙이 위에 사례로 든 김장배추의 경우이다. 그래서 일단 공급과잉 상태로 판단되면 즉시 생산량을 과잉된 만큼 줄일 경우는 적어도 가격의 하락은 막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낙농의 경우, 첫째, 가격은 수급에 관계없이 정부가 보장해주는 지지가격을 받을 수 있고

둘째,수급은 일단 유업체들이 말

다가 일정 한도가 넘으면 무조건 낙농가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주거나 납유량 삭감을 강요하고

셋째, 우유에 대한 공동소비홍보는 하지않고 유업체끼리 서로 비방이나 하고 헐뜯기를 일삼아 낙농전체에 대하여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혐오감과 불신만 조장케하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낙농이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 원인은 낙농에 대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방향이 흔들려 왔기 때문이다. 그것을 정부에게만 탓 할 수도 없다.

유업체도 낙농을 대하는 자세가 불순하였고 낙농가들도 몇몇 순수하지 못한 자들이 지도자인척하면서 감투와 사리사욕만 챙기려하기 때문에 낙농문제가 엉망진창이 되어 버린 것이다.

다행이 정부의 끈질긴 노력으로 낙농진흥법이 개정되어 수급안정이 쿼터제의 실시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하다.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낙농도 현 경제체제하에서 낙농의 특성에 걸맞지 않는 계약생산제도로 수급안정을 추구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한 제도는 원유의 사용품목별 차등가격제도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계약생산제도는 계약된 우유생산량은 제값을 주고 초과생산분은 분유처분가격으로 값

을 쳐서 유대를 정산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일부는 시유로, 일부는 치즈,버터,분유 등으로 만들어 팔았을 때 그 값을 합산,평균정산하여 유대를 지불하는 품목별 차등가격제도와 유사한 것이다.

계약생산제도는 계약된 원유량은 제값을 보장은 받지만 고정되어 있고 그 대신 생산확대에 제한을 받게 되지만, 품목별 가격차등제도는 생산된 원유가 시유로 많이 팔렸을 때 전체 원유가격이 높아지며 반대로 시유가 적게 팔리고 분유가 많이 만들어 지면 원유가격이 낮아지지만 우유의 생산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두가지 제도는 모두 수급안정에는 가장 확실한 제도이며 농가의 생산활동에 대한 보장,생산자유,소득측면 등으로 볼 때는 품목별 차등가격제도가 낙농가 입장에서 훨씬 유리하고 계약생산제도는 경제적측면에서 매우 경직된 제도일 뿐 아니라 제도의 운용면에서도 유연성이 없는 것이다.

이와같은 견해는 분유류와 치즈, 유사버터 등의 수입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성수기에도 주말이면 분유를 불어야하는 현상이 나타난 우리나라의 낙농사정 하에서 고려된 것이다.

수급안정을 위하여 위와 같은 제

도가 도입되었을 때이든 도입되지 않았을 때이든 낙농가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원유가 소비시장에서 많이 팔리게하여 생산확대와 소득제고를 달성하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낙농가들이 모두 그렇게 하듯이 우리 낙농가들도 자신의 작은 이익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공동홍보를 위한 출자에 기여이 동참하여 자신들의 생산복지를 계속 확대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 공동홍보에 참여한 농가와 참여하지 않은 농가를 차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낙농은 결코 자기 혼자만 잘 될 수 없는 농사다. 그래서 낙농에서 특히 협동조합운동이 강조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업종조합에서 낙농조합만이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결성되고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세계의 모든 낙농가들이 낙농협동조합에 가입하고 협동적인 생산활동을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세계시장에서 우리 낙농이 살아 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낙농제도의 개발과 도입이 필요하다. (㉞)

〈필자연락처 : 02-433-8151〉

낙농자조금은 낙농가 스스로의 자구 노력입니다.